

# 민주당 칼끝, 한덕수·한동훈·정호영에…“尹 인사 참사”

### “임대왕·법꾸라지·아빠찬스 지명철회해야” “부실 조차 아닌 무죄추정·답정너·無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꼭 짚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 3인방’을 향해 공세를 집중하는 것으로, 인사 실패를 집중 부각시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선제압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왕·축재왕·특혜왕 소리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고통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사참사의 모든 책임

은 내각을 친구와 동문, 심복으로 가득채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며 “이쯤되면 윤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라미달 후보자들을 지체없이 지명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검정과 국제정 등 각급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과 현 정부 인사검증 DB(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음에도 드러나는 부실 검증 사례는 인수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가 아닌 윤 당선인 의중에 맞춘 거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윤석열 인수위의 인사검증은 하루짜리, 무죄추정, 답정너 인사검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주임검사였던 주 변호사는 윤석열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하마평이 나온다.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민형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실력보고 인선한다더니 인연을 보고 인선하는 윤 당선인이 심복과만 상의하며 철저한 검증없

이 내각 명단을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후보자 자질, 도덕성,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인선했는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혹독한 검증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 기본적인 검증 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인사검증팀의 주진우 변호사는 자급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측근정치, 측근인사만 남무한다. 공정의 가치를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낙마 3인방’을 지목하며 강공모드에 나선 것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2주 연속 오른 57%,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친 바 있다.(12~14일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정권 초 ‘안정감’에 무게를 실은 여론 성적상 지선 한달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예비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도를 ‘인사 실패’ 논란을 부각시켜 뒤집으려는 시도인 셈이다.

특히 윤 후보자의 ‘40년 지기’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과 고위급을 지낼 때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과, ‘2급’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던 아들이 경북대병원 진단서



로 ‘4급’ 사회복지요원 대상이 된 것을 둘러싼 ‘아빠찬스’ 논란이 과거 문재인 정권을 코너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윤 당선인 측에도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리란 기대도 엿보인다.

윤호중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던 당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곳을 압수수색

했느냐.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건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정호영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가세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고민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호응했다. 윤 당선인이 ‘확실한 부정의 팩트’를 언급하며 감싼 데 대해선 “그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검찰에서 수사할 때 압수수색이란 걸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힐난했다. 최이슬기자

## 安 “방역예산 확보해야…추산액 곧 발표” 김진태, ‘5·18민주화운동·조계종 논란 발언’ 대국민사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은 18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발표되지 않는 것이라며, 청문회는 후보자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연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말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좀 바로잡겠다”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원 후보자는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고, 대외적인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는 부동산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다. (인수위 내

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따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시사한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규모가 축소되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손실 규모) 추계가 됐다”며 “데이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인수위에서 나왔다”고 언급하며 5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곧 다가올 수도 있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역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해야 된다”며 “합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는 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 김진태, ‘5·18민주화운동·조계종 논란 발언’ 대국민사과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 후보 심사에

### 사과 기자회견 열어

서 탈락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5·18 민주화운동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며 “이 일로 상처받은 국민에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고승대덕 및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며 “당시 조계종은 민주노동총연맹과 경찰의 대립을 끈기 있게 참아냈다. 고통 받는 국민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국민을 더 섬기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통합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이 한

상군 민주노동 위원장의 보호 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2019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공청회를 공동주최하고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김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김진태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의 발언에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 (후보 공천 재심)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일부 공천위원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공천된 황 전 앵커의 단수공천 승인을 불허하고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